

육계산업 회생을 위한 정부지원대책 시급

최근 육계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의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업계회생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육계산지가격이 두달여 가까이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돼 온데다가 최근에는 생체기준 kg당 7백원대까지 폭락, 어려움의 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 불어닥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기에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도 육계업계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년과 같으면 몇 개월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불황을 견디며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MF시절보다도 더 혹독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산 닭고기의 수입도 한숨을 쉬게 하고 있다.

지난 98년 1만1천729톤이던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4만5천975톤으로 391%가 늘어났으며 올해 11월까지만 6만268톤이 수입돼 전년도 총 수입물량보다 31.0%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대일 돈육수출의 중단 등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등으로 인한 닭고기 판매량 감소 등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육계업계에 대한 압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실 현재 겪고있는 육계업계의 어려움이 단순히 업계자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타 축종과 비교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소나, 돼지가격이 오랫동안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면 현재 육계와 같이 방치하고 있겠

는 것이 대다수 업계 관련인들의 생각이다.

더욱이 현재 육계업계나 계육업계가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돈육가격 폭락에 따른 영향임을 감안할 때 계육업계로서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계인들의 중론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돼지가격의 폭락은 예견돼왔던 사안이며 사전에 충격을 어느정도 흡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으며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시적 대응이 계육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육가공업체에 계정육 대체육으로 돈육사용을 촉구, 그 여파로 인해 노계육을 가공, 판매해왔던 계정육업계가 폐업을 하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 직전에 있는 것이 이업계의 현실정이다.

더욱이 돼지가격의 경우 조금만 하락해도 정부에서는 비상대책이다, 정부수매다 뭐다해서 난리를 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육계업계의 심각성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무관심한 것도 업계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육계산업이 말로만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이 아니라 실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같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 돼지에 쏟아붓는 것의 절반이라도 육계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준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조기에 진화되고도 남았으리란 것이 관련인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우선 폭락하는 육계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자금을 조기에 투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닭고기 수출대책, 소비확대 홍보 등 육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육계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전환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